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운영 지침

---

2025. 1.

인적자원개발과



## 목 차

I. 총칙 .....	1
II. 사업 개요 .....	2
III. 사업 운영 단계별 지침 .....	8
1.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 .....	8
2. 지역별·산업별 훈련·인력수요의 조사 .....	11
3.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발굴 .....	16
4.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심사 .....	18
5. 훈련과정의 확정과 승인 등 .....	31
6. 훈련 운영상황 등 사업 모니터링 .....	36
7. 사업결과보고, 사업운영기관평가, 정산 .....	38
〈붙임〉 각종 양식 .....	41



# I. 총 칙

## 1

### 추진 배경

-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앙(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체계는 지역별 차별성 고려와 훈련공급시기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시범 사업 운영을 거쳐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설
  - 이를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 국민이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직무 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 2

### 추진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등

## 3

###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의 운영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아울러, 본 지침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적용

## II. 사업 개요

### 1 개 요

-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발굴 및 심사를 담당하여 온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별도로,
  -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역량이 있는 기관 중  
일부를 선정하고 역할 및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 지역·산업현장의 세부 훈련수요 등을 조사하고,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발굴·심사 추진
-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 그에 참여하려는 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우대함으로써
  -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 추진

### 2 사업 규모

- 2025년 약 641억원 편성(훈련목표인원 20,000명)

#### < 2025년 예산안 편성내역(총 64,103백만원) >

- 훈련비 53,077백만원 <20,000명 × 2,654천원>
-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8,420백만원 <20,000명 × 421천원>
-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2,600백만원 <19개소 × 약 136백만원>

### 3 훈련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각 호)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
  - 나.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다. 「다문화가족지원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용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삭제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가. 운영기관(RSC, ISC)에 훈련과정 발굴·심사권한 부여 및 운영비 지원

- 운영기관이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지원대상산업·직종)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육성산업·직종)’을 선정\*
- \* <정의> ① (지원대상산업·직종) 고용통계자료, 인력·훈련수요조사 등에 근거하여 재직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직종  
 ② (육성산업·직종)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와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  
 < 선정방식 > ① (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  
 ② (직종 분야) NCS 직종분류체계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
- 해당 분야의 세부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그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발굴
-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자체 수시 심사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 < 운영비 지원 >

- (운영비 산정) 운영기관별 연간 훈련배정인원의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액 산정

연간 훈련배정인원	운영비 기준금액
1,500명	180백만원
800명	100백만원

※ 운영기관 선정심사 결과,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운영비 지급절차) 위탁계약 시 총 운영비의 70%를 선금금으로 지급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수 완료 시 공인회계사 정산을 거쳐 잔금(30%) 지급
- (운영비의 활용) 운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3명 내외), 홍보비, 수요조사비, 훈련과정 심사비 등에 운영비 활용 가능

### 나. ‘훈련기관’의 참여 장벽 완화 및 훈련비 우대 인정

- 본 사업상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면 진입 허용

\*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대학, ③평생교육시설, ④평생직업교육학원, 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운영기관이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고용노동부(본부 또는 관할센터)와 협의된 훈련과정으로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00%까지 인정(심사 및 정산 필요)

#### 다.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지원

- (**훈련비**) 국민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통하여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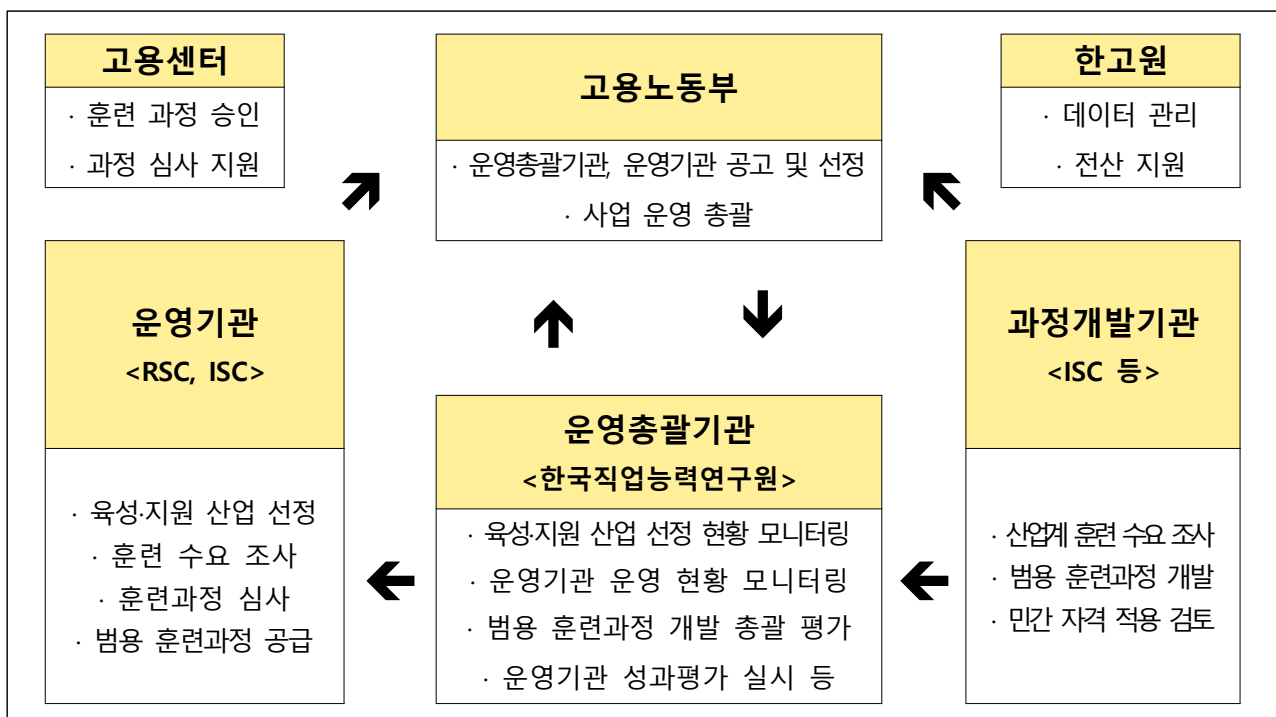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300만원)에서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유사하게 훈련비 총액과 상관없이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 (**특별훈련수당**)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 훈련과정에 대하여 참여 부담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장려금(월 11.6만원) 이외에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원(월 20만원)

## 5

### 사업 주요 절차

#### < 사업 체계도(안) >



**① (운영기관 선정 등)**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적정 계획을 보유한 운영기관을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사업계획의 적절성, 훈련목표인원 적절성, 사업목표인원의 달성 가능성, 운영비 예산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기존 훈련 사업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운영총괄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실시

**② (지원대상산업 등 선정)** 운영기관은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산업·직종'과 인력양성이 필요한 '육성산업·직종'을 본위원회 의결로 선정

**③ (훈련수요 발굴 및 훈련기관·과정 심사)** 운영기관은 지원대상산업·직종 종사자 등과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 훈련수요 발굴

- 운영기관은 훈련기관 간담회, 공모 등을 통하여 훈련수요에 부합하는 훈련기관 및 과정을 발굴하고,

\* 세부 훈련수요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발굴함에 있어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 전문가·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등으로 특별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그 적정성, 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을 심사 및 의결\*\*

\* 본위원회에서 훈련과정 등 심사 권한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에 위임하여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고용센터(직능 과장 또는 팀장)가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함

\*\* 훈련 실시율 제고를 위해 당해 목표 물량(인원)의 150%까지 승인 가능('22.9월~, 다만, 성과평가 시에는 당해 목표 물량(인원, 100%) 적용)

- 특히, 지역의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양성훈련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심사 시 훈련비 심사를 병행

\* 정부 승인 훈련비(NCS 지원단가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한편, 심평원은 운영기관이 훈련기관 및 과정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컨설팅 등 제공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는 지역별 훈련과정 현황, 훈련기관의 인증평가 결과 등

- ④ (**훈련과정 승인 등**)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서 적정성을 의결하고 승인을 요청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본 사업을 통한 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 최종 확인 및 HRD-Net 처리 등 수행

- 요건 미충족 훈련과정은 운영기관 및 훈련기관에 보완요청

#### < 훈련과정의 요건 >

- 본 사업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여러 우대사항을 적용받는 만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운영이 승인되도록 제한
- ① (**훈련과정의 필요성**)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운영기관 또는 훈련기관 등이 수행한 수요조사 등에 근거할 때 해당 훈련과정이 지역에 개설될 필요성\*이 있을 것
  - \*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훈련기관 및 과정의 적정성**) 훈련기관의 실시역량, 훈련과정의 교과목·교·강사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것
  - \*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에서 인증유예 및 조건부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 부적합 판단을 받은 훈련과정은 당연 제외

- ⑤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훈련과정의 운영현황을 수시 확인하여 위탁계약상 사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훈련과정의 개설현황, 훈련실시인원 등을 토대로 훈련과정 개설 지연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 컨설팅 및 지원, 훈련과정 추가 발굴·심사 등 적극 수행

- 본부는 「사업추진 유관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정 및 지침 변경 등 필요사항 지원
- 본부는 운영총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수행결과 및 훈련과정의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개선방안 등 도출 및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

### III. 사업 운영 단계별 지침

1

####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선정

##### 가.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의 정의

- ☐ (**지원대상산업·직종**)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경영 또는 고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 해당 분야 종사자 등에게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고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를 의미함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산업·직종 재직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전직 지원을 위해 훈련수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근거로 훈련과정을 공급

- ☐ (**육성산업·직종**)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를 의미함

※ 육성산업·직종은 운영기관이 훈련 및 인력수요의 발굴, 훈련과정의 공급을 통해 양성하여야 하는 분야로,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추가 우대(300% 이내) 및 훈련생에 대한 특별훈련수당이 지원되는 분야임

##### 나. 선정 기준 및 방법

- ☐ (**공통**) 산업 분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이하 기준으로 선정, 직종 분야는 NCS 직종분류체계상 소분류 기준으로 선정
  -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의 선정 개수에 제한 없음
- ☐ (**지원대상산업·직종**) 운영기관은 지역고용현황 관련 자료의 분석\*, 자치단체,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 산업 및 직종 분야 선정

\* 지역고용현황 관련 자료로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접수 현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폐업 신고 현황 등 활용

- 지원대상산업·직종에서 산업 분야는 필수적으로 선정하되, 직종 분야는 수요조사의 구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보충 선정

※ <지원대상산업·직종 선정 예시>

- ①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301)
- ②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301)의 자동차 정비 직종(150603)

- (육성산업·직종) 운영기관은 자치단체·산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개별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내 직종 분야인지를 판단하여 선정

- 육성산업·직종을 선정할 때는 '특정한 신산업 분야 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과 같이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과 관련된 산업 분야와 직종 분야를 모두 규정하여야 함

※ <육성산업·직종 선정 예시> '태양광발전설비' 직종

- (개념) 태양력 발전산업에서 태양전지, 전력전자, 계측제어, 전기설비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계, 시공 및 유지 보수하는 기능·기술에 관한 직종
- (산업·직종 분류) ① 산업 분류: 전기업(351) 내 태양력 발전업(35114)  
② 직종 분류: 전기설비설계·감리(190106), 전기공사(190107), 전기자동제어(190108), 신재생에너지생산(230505), 산업안전관리(230601)

다. 선정 절차

- 운영기관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을 최종 선정
- 본 위원회의 개최 방법은 대면 또는 서면 등 유연하게 결정

## 라. 유의 사항

- (**고용노동부 본부**) 본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동 등 산업·직종에 관한 정보를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의 선정, 훈련과정 심사 시 우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본부가 산업·직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의 선정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거나 검토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심사 시 우대하여야 함
  -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아울러,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이 선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및 운영총괄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보고 또는 공유하여야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운영기관이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고용현황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가. 훈련·인력수요의 조사대상

-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 및 실업자,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훈련 및 인력수요를 조사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산업·직종 내에 ①이·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③실직자 중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 소속 근로자의 이·전직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원대상산업·직종 내의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과 관련된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 지역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 나. 훈련·인력수요의 조사 내용

- 운영기관은 조사 대상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훈련과정의 발굴·공급·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은 예시로 활용
  - (**근로자, 실업자 등**) ①이·전직 및 취·창업 등을 희망하는 분야, ②이·전직 및 취·창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능력, ③관련 직업훈련과정 개설 시 참여 의사 등
  - (**기업, 사업주단체 등**) ①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능력, ②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③신규 인력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능력 등
  - (**전문가 등**) ①지역 내 인력이 부족하거나 양성이 필요한 분야와 해당 분야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②인력필요 분야 등에 대한 훈련과정 유무, ③지역 내 필요 훈련과정의 개설 가능 여건 등

## 다. 훈련·인력수요의 조사 방법

- 운영기관은 조사 대상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간담회, FGI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라. 훈련·인력수요 조사 시 훈련생 우대사항 안내

- 운영기관은 지역 내의 훈련 및 인력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직자, 실업자 등과 접촉하는 경우,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훈련비 >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계좌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

### ※ 훈련비 지원한도의 추가(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 300만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다음 해당자들에게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구 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00만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 출소예정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장애인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7. 한부모가족 해당자	
8. 북한이탈주민	
9. 아프간 특별기여자	
10.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단, 선발형 청년층은 제외)인 경우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자는 훈련과정의 직종별 평균 취업률 등에 따라 훈련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4 발체)

\* '괄호( )'는 자비부담률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7.5%)	87.5%(12.5%)	82.5%(17.5%)	77.5%(22.5%)	72.5%(27.5%)
일반훈련생			65%(35%)	55%(45%)	45%(55%)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년·중장년층	85%(15%)	75%(25%)	70%(30%)	60%(40%)	50%(50%)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100%(없음)				80%(20%)

□ 다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훈련 및 인력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그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대

- 훈련참여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단, 계좌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

\* ▲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따라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 (단,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가 남아있어야 함)

- 다만,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인 경우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며 수강신청 및 참여 가능

※ '재직자에 대한 별도의 훈련비 전액 지원 혜택'의 목적 및 적용 사례

- (목적) 재직자가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강하기에 용이한 단기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 유도
- (적용사례) 산대특 훈련과정 수강신청 당시 재직자로서 별도의 훈련비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산대특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운영되는 다른 훈련과정(일반계좌제훈련 등)은 "타 훈련과정"으로 지칭

▲ 산대특 훈련과정① 참여(훈련비 80만원, 전액 지원)→ 산대특 훈련과정② 참여(훈련비 80만원, 전액 지원)→ 산대특 훈련과정③ 참여(훈련비 80만원, 전액 지원)

\* 지원된 훈련비는 240만원이나, 훈련참여자의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차감

▲ 산대특 훈련과정① 참여(훈련비 100만원, 전액 지원)→ 타 훈련과정② 참여(훈련비 100만원, 국비 지원율 50%)→ 산대특 훈련과정③ 참여(훈련비 130만원, 전액 지원)

\* 국비 지원된 훈련비는 280만원이나, 훈련참여자의 계좌한도에서는 250만원 차감(타 훈련과정 참여에 따라 50만원 차감,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에 따라 200만원 차감)

○ **(유의사항)** 산대특 훈련과정 수강신청 당시 실업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의 횟수가 1회로 제한 → 기존에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재직자 상태에서 1회 전액 지원을 받은 이후 실업자가 된 경우에도, 전액 지원 이력이 있으므로 추가로 전액 지원되지 않음(실업 상태에서 재직 상태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추가 전액지원 불가)

-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 훈련비 전액 지원 관련 사례 정리

□ 국기훈련, 산대특, KDT 훈련에 최초 참여하는 경우 각 사업별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가능<각 사업별 수강 순서와 무관하나 계좌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원>

사례1) 국기 전액(훈련비 200만원 이상 훈련의 경우 계좌 잔액에서 200만원 차감) → 계좌 잔액이 100만원 남았으므로 KDT, 산대특 추가 수강 가능

사례2) 산대특 전액(훈련비 200만원 이상 훈련의 경우 계좌 잔액에서 200만원 차감) → 계좌 잔액이 100만원 남았으므로 KDT, 국기 추가 수강 가능

사례3) KDT 전액(계좌 잔액에서 300만원 차감) → 계좌 잔액이 없으므로 국기, 산대특 추가 수강 불가능(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좌 한도를 추가하여 계좌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강 가능)

### < 훈련장려금 >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월 11.6만원 등)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 특별훈련수당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월 20만원)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훈련과정) 개별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육성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위 요건 충족 시, 훈련생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 지급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 × 1만원' 방식으로 산정)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제한 가능

### < 생계비 대부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음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발굴 방법

- 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훈련 및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을 최종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발굴

\* (예시) OO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중 공모 대상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됨\*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심사·승인 이후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 등에 따라 변경하도록 안내

- 공모의 시기, 횟수,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으나, 운영기관이 수행한 훈련 및 인력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 발굴이 필요한 분야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훈련과정 공모 시 ①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고용유지 훈련), ②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전직 및 취·창업훈련)으로 구분하여 훈련과정 심사 접수 등을 진행하여야 함

※ 훈련과정의 유형에 따라 성과평가를 상이하게 진행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구분

- 운영기관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공모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해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붙임 1 양식) 및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붙임2 양식)을 접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①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 및 내용, ②공모 및 심사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영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발굴 시 유의사항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발굴을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공모 및 심사 절차에서와 달리 특별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함

○ (인증평가 면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은 일반적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사전에 거쳐야 하나,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인증평가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훈련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되는 훈련 과정은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적용\*

\* <적용 시점> 2025. 1. 1. 이후 승인된 훈련과정부터 적용(24년 승인 과정은 기본 130% 적용 유지)

- 다만, 위기 산업 재직자 이·전직 지원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과정\*은 훈련비 지원단가 기본 우대(지원단가의 130%) 적용(정산 불요)

\* ① 재직자 대상 단기과정(총 훈련 시간이 140시간 미만인 과정)

② 운영총괄기관이 보급한 훈련 과정(ISC 등이 개발한 범용 훈련과정)

③ 지자체 협업 과정(▲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소속 재직자 또는 구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 또는 구직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한 과정 ▲지자체 기본계획, 조례 등에 명시된 지역 중점 사업으로 지자체가 고용센터, 운영기관 등에 명시적으로 훈련공급을 요청한 과정<회의록, 공문 등 증빙자료 필요>)

- 다만 운영기관이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고급·특수 훈련 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 심사 절차(30p)를 거쳐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정산 절차 필요)

\* 지역별·산업별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훈련비 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본부 또는 관할센터)와 협의된 훈련과정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 가능

※ 운영기관은 훈련과정 공모 시, 추가 훈련비 심사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함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적용받는 훈련과정은 타 사업과 동일하게 주말 훈련에 따른 훈련비 120% 지원 적용(내배카 운영규정 제48조)

- (**훈련과정 유효기간 등 제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되는 훈련과정은 그 유효기간(개설가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최대 1년 이하로 제한함
- \*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운영기관의 훈련과정 심사 및 확정 이후 훈련기관이 HRD-Net에 훈련과정 정보를 등록 및 인정 신청하여 고용센터가 인정 처리한 일자임
- (**연간 훈련가능인원 부여**)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서는 훈련기관에게 훈련과정별로 유효기간(1년) 내에 훈련이 가능한 인원을 산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결정하여야 함
  - 훈련기관은 결정된 훈련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4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심사

### 가. 총괄

- 운영기관은 ‘본위원회’ 또는 ‘본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한 조직’(특별분과위원회 등)을 통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함
  - \* 지원대상산업·직종 등의 선정과는 달리 담당 조직을 본위원회로만 제한하지 않음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심사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내 직업능력개발 담당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그 밖의 심사 조직의 구성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관련 내용 전문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결정

## 나. 훈련기관의 심사 방법

□ 운영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와는 별도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모에 참여한 훈련기관이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훈련기관 심사 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고)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② 훈련기관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등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유형에 따라 준법성(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이력 등) 및 재정건전성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인증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1~5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미 준법성 등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도 심사 없이 적정 판단
- (인증 미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친 이력이 없는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준법성 심사’는 관할 고용센터, ‘재정건정성 심사’는 해당 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

※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

- 최근 1년간(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

구분	필수 확인 항목(4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1]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명령) 처분당 1점 감점</li> <li>·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당 5점 감점</li> <li>·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①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②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③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li> <li>·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①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②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li> </ul>
	[2] 임금체불 이력 여부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3]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 건전성	[4] 세금체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체납: 10점 감점</li> <li>·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li> <li>* 서류 미제출, 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불가,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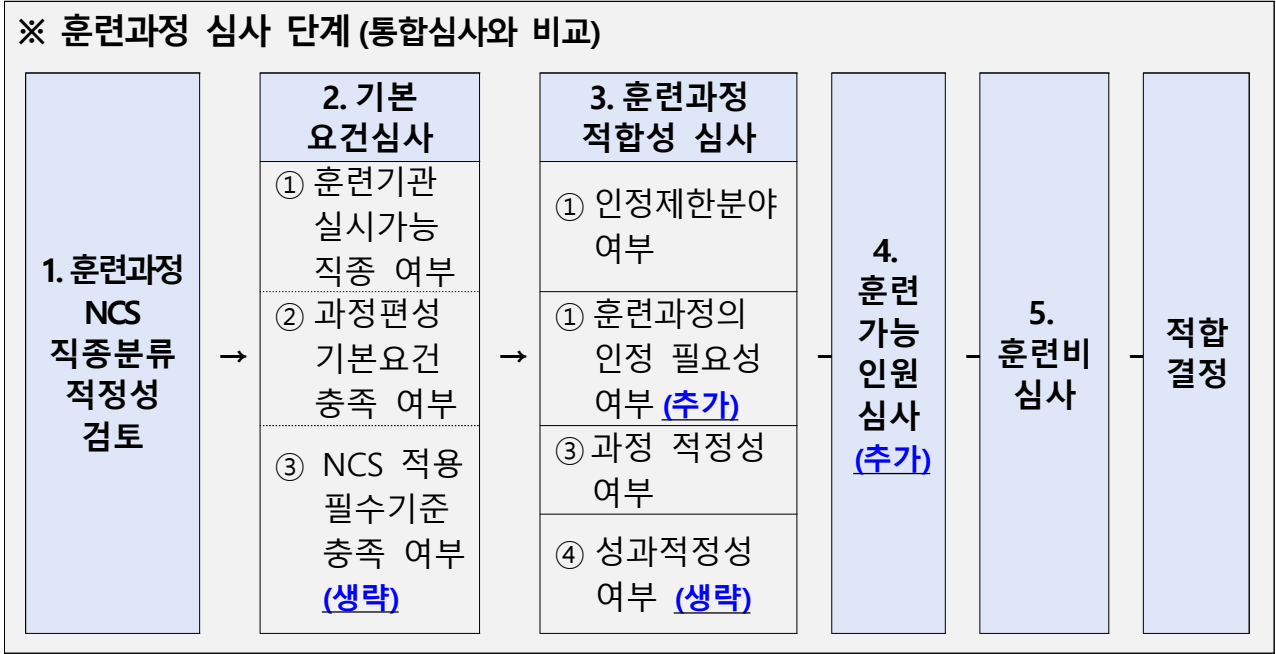
- ③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을 받은 기관은 준법성, 훈련성과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곳임을 고려하여 별도 심사 없이 부적정 판단을 내려야 함
- ④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실제 적정한 시설·장비, 장소 등을 구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훈련과정의 심사 방법

- 운영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 기준과는 별개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훈련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음

○ 다만, 운영기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통합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참고하여 심사 단계별로 다음 사항은 준수 및 유의하여야 함

○ 더불어, 운영기관은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 능력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공, 자문 등을 요청하고, 직업 능력심사평가원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적정한 NCS 직종으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2-①.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여부 >

- 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의 유형에 따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직종이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 훈련기관(시설) 유형별 직종부합성 검토사항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검토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전공)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	• 교육과정편성표의 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정관 • 소속 회원사 명단	•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 지정서 또는 법령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기타	• 정관	•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 ※ 훈련시설의 실시가능직종 관련

- 훈련기관은 그 유형(지정직업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따라 실시 가능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등)
- 다만,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
  -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현재 실시가능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예상소요기간 1~2주, 법정처리기간 20일)

## < 2-②. 과정 편성 기본요건 충족 여부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참여자의 취·창업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훈련시간·기간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최소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개설되는 훈련과정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해당하므로, **훈련과정의 유형에 따라 기본요건**(훈련시간 및 기간, 강의실 등 최소면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고용유지 훈련)은 **재직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에 따라 심사하고,
  - ②**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전직 및 취·창업훈련)은 **실업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에 따라 심사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통합심사)	
구분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b>[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b> • 실업자 계좌제: <b>10일 이상, 40시간 이상</b> • 실업자 국가: 3개월 이상 1년 이하, 350시간 이상 • <b>재직자 계좌제: 2일 이상, 16시간 이상</b> • 사업주 위탁: 4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의실	<b>[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기준]</b> • 실업자 국가: 20인 기준 45㎡(1인 추가 시 1.5㎡) • <b>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b>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 최소 준수 여부 판단하고,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
실습장	<b>[실습실(실습장)의 최소 면적기준(권고)]</b> •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 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기준의 50% 면적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면적 기준 적용 ※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에 필요한 시설면적의 100% 적용
기타	<b>[기타사항]</b> •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 < 2-③. NCS 필수 적용 기준 충족 여부 (생략) >

- 통합심사에서는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NCS 적용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나,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상 훈련과정은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NCS 기준을 필수 적용하지 않으므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NCS 능력단위별 시설·장비 기준도 필수 적용되지 않음  
(단, 훈련과정 개발 시 해당 NCS 시간·장비·시설 기준은 참고할 것)

### < 3-①. 인정제한분야 여부 >

- (**인정제한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향상 등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서도 인정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야 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등 참고

- 인정제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함

\* <예시> ① “골프장 캐디 양성과정”, “헬스트레이너 양성과정” 등은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인정 제한, ② “공인중개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자격과정 등은 자격시험과 관련된 지원 필요성이 적은 과정으로서 인정 제한 등

※ 인정제한분야 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5항)

-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호가목(사내대학), 나목(기술대학),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 ④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⑤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과정 포함). 단,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등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취업서비스(전직지원) 관련 훈련과정
-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예)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
  - 예)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단, 재직자 계좌제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예)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

※ 외국어 훈련과정 관련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개설할 수 있음
  - \* 재직자는 훈련 참여시 훈련비의 50% 국비 지원, 실업자는 미지원
- 따라서, 외국어 습득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반적인 훈련과정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하여 개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정 제한

### < 3-②. 훈련과정의 인정 필요성 여부 >

- 운영기관은 신청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인력수요와의 부합성 여부, 중복훈련 유무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의 인정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함
- (**훈련인력수요 부합성**) 운영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훈련 및 인력수요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훈련과정을 본 사업을 통하여 수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이 훈련 및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훈련 등이 필요한 분야로 훈련과정의 분야를 제한하여 공모한 경우에는 훈련과정이 해당 분야와 실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 운영기관이 훈련과정의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훈련기관이 훈련 및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공모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 및 인력수요조사의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함
- (**중복훈련 유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공급체계를 보완하여,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장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수시 공급하는 것이므로
  - 기존 공급체계(통합심사)를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 등과 중복되는 훈련과정을 본 사업을 통해 개설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운영기관은 심사를 통해 기존 훈련과정과 중복 소지가 있는 훈련과정은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훈련과정의 중복 여부의 정의 및 판단

- (**중복훈련의 정의**) 훈련기관 A가 개설하려는 훈련과정 B와 관련하여 ① 훈련기관 A가 통합심사를 거쳐 훈련과정 B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훈련물량 증대 목적), ② 훈련기관 A가 이전 통합심사에 훈련과정 B의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훈련과정의 내용상 부적합 판단을 받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훈련심사 우회 목적)를 의미
- (**판단방법**) ① 운영기관은 훈련과정의 심사를 신청한 훈련기관에 한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이 최근 1년간 '통합심사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의 목록' 및 '통합심사에서 내용 부적합 판단을 받은 훈련과정의 목록 및 사유'에 대하여 심평원에 자료요청

- ② 운영기관은 심사 신청된 훈련과정의 실시계획서와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비교하여 중복 가능성에 대한 1차 판단
- ③ 운영기관은 1차 판단 시 중복훈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훈련기관에 훈련과정의 개설 필요성, 타 훈련과정과 훈련내용상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과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붙임의 소명서 예시 양식 활용)
- ④ 운영기관은 훈련기관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중복훈련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 후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
  - \* 심사 시 고용센터 직능 담당자(과장 또는 팀장)를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중복훈련 여부의 검토에 적극 참여
- ⑤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훈련과정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훈련과정 심사 의결서,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등과 함께 훈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
- ⑥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훈련과정 승인

### < 3-③. 과정 적정성 여부 >

- 운영기관은 위기 산업 종사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훈련목표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이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①훈련내용, ②훈련방법, ③훈련교·강사, ④훈련시설, ⑤훈련장비를 갖추었는지 등 과정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 훈련내용, 훈련방법 등 과정 적정성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미흡한 요소가 있는 경우, 부적정 판단을 내려야 함
  - 한편, 해당 지역의 훈련수요가 많아 운영기관이 발굴한 모든 훈련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운영기관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책정하여 우수 훈련과정부터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훈련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훈련목표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본부)와 협의하여야 함

※ 과정적정성 심사 항목 및 기준 <예시>

심사 항목	심사기준	최종결과
① 훈련 내용	훈련과정명, 훈련목표와 훈련대상수준에 부합하는 훈련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충족 ○미흡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훈련목표를 고려해 볼 때 총 훈련시간 및 교과목별(주제별) 훈련시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과소·과다 여부 확인)	○충족 ○미흡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교과목에 적정한 훈련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② 훈련 방법	훈련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충족 ○미흡
	훈련목표 성취 및 내용 습득을 위해 적절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가?	○충족 ○미흡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③ 훈련 교·강사	훈련교·강사가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최소요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내용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충족(충족하지 않을 경우, '미흡' 으로 판정)	○충족 ○미흡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④ 훈련 시설	훈련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면적이 적정한가?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훈련시설을 구비하였는가?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⑤ 훈련 장비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수량이 적정한가? 산업현장 활용도, 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사양(내구연도 등)이 적정한가?	○충족 ○조건부
	평가점수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 < 3-④. 성과 적정성 여부 (생략) >

- 통합심사에서는 신청된 훈련과정 중 이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여 우수 훈련 과정이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산업별·지역별 현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과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운영기관은 훈련과정 공급의 우선 순위 등을 정해야하는 경우 성과적정성을 심사 시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대신하여, 운영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을 받은 훈련기관이나,
  - 기존 통합심사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 훈련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사전에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4. 훈련가능인원의 적정성 여부 (추가) >

- 운영기관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조사 결과, 운영역량, 인프라(시설, 장비, 교·강사 등) 등을 기반으로 작성 및 신청한 연간 훈련가능인원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훈련기관의 운영역량,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신청한 연간 훈련가능인원만큼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원 수를 축소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훈련과정의 훈련가능인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체 사업수행계획서상 훈련목표인원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 적정하다고 심사 및 개설할 훈련과정의 훈련가능인원 총계가 사업수행계획서상 훈련목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하여야 함

## < 5. 훈련비 심사 >

- **(심사대상)** 운영기관은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고용노동부(본부 또는 관할센터)와 협의된 훈련과정으로 정부승인훈련비(NCS 지원단가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추가 우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방법)** 훈련비 심사는 '①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요건(하단 표)'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②훈련기관의 훈련비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신청된 훈련비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
  - \* 훈련비 심사 시 예산 비목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 상 기준에 따름
- 운영기관은 훈련기관에 통합심사상 '실비 예산비목 및 산정기준'에 따라 훈련비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 구체적인 훈련비 심사 방법 등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컨설팅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 ※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으로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할 것
- ② 또는 지역별·산업별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승인훈련비(NCS 지원단가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본부 또는 관할센터)와 협의된 훈련과정일 것

####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 번	요 건	세 부 내 용
①	훈련 교·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할 것(㉠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②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일 것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
③	훈련 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일 것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
④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각 요건별 충족 여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조

⇒ ①~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 **(유의사항)** NCS 지원단가의 130%를 초과하는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회계정산 대상에 포함되고, 운영기관은 회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을 훈련기관에 안내하여야 함

\* <정산 시기> 정산 대상인 훈련과정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정산 방법> 운영기관의 훈련비 심사 당시 검토하였던 훈련실시계획서, 훈련비산출 내역서와 어긋나지 않게 훈련비를 사용했는지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세부 정산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

## 5 훈련과정의 확정과 승인 등

### 1. 훈련과정의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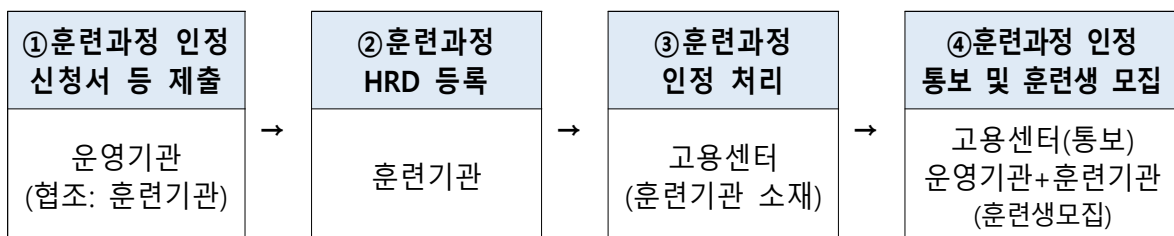
- 운영기관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을 마친 경우에는 심사를 담당할 조직(본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등)의 의결을 통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 아울러, 운영기관은 훈련기관에 통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한 훈련과정의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부적정 고지한 훈련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 훈련과정의 인정 및 개설

- **(개설절차)** 운영기관에서 내용 등이 적정하여 개설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훈련과정을 인정·개설하는 절차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함

#### < 훈련과정 인정·개설 >



- ① 운영기관은 ‘본위원회의 **훈련과정 확정 의결서\***’, 확정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훈련과정 인정신청서**(붙임 1 양식) 및 **실시계획서**(붙임 2 양식)’를 최소한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운영기관의 훈련과정 심사·확정이 본위원회가 아닌 특별분과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권한 위임 의결서’, ‘특별분과위원회 등의 훈련과정 인정 의결서’를 대신 송부하여야 함

\*\* (주의) 훈련기관은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고용센터**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아야 하므로, 관리번호가 없는 훈련기관을 선정한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조하여 관리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② 훈련기관은 **HRD행정지원시스템**에 해당 과정을 등록 처리 및 신청

**< 훈련과정 입력사항 >**

구 분	내 용
기본정보	훈련기관정보(기관명, 훈련기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유형, 소재지) 훈련과정명(담당자 연락처 등), 주야 구분, 정원, 훈련일수(시간) 등
훈련과정 내용	훈련목표, 훈련가능인원, 훈련내용, 훈련시간표, 훈련대상자, 훈련수준 등
훈련과정 상세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교·강사, 훈련교재 등
훈련비 산출	훈련비 등

※ 단, ① ~ ②까지의 절차는 운영기관의 훈련과정의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에 대한 고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해당 기간(6개월)은 운영기관의 고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6개월이 도과된 이후 제출된 과정은 미승인 처리(동 지침 시행 이후 승인된 과정부터 적용)

- ③ **고용센터**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실시계획서의 내용이 **운영기관에서 의결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최종 확인 후 인정 처리**
- ④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훈련과정 확정 의결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붙임 3 양식)\*를 발급하여 **운영기관 및 훈련기관에 통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용(붙임 3 참조)

### 3.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 고용센터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카드발급 또는 수강 신청 등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상담을 생략

\* 단, 진단·상담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시

### 4. 훈련과정 내용, 훈련인원 변경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는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하여 변경 인정·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여야 함

\* 다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에 대하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평가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을 적용하지 아니함→ 필요한 경우, 훈련과정 심사를 진행한 운영기관과 협조하여 변경 인정 여부 결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 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 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변경예정일의 4일 전까지 이를 검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신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예정일의 전일까지 HRD-Net을 통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인정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 교·강사를 교과목별로 인정을 받은 훈련 교·강사 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훈련 교·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 교·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실습실로 변경
3.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장비 교체
4.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5.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6. 최초 인정받은 소정훈련시간 및 교과목별 시간수에 변동 없이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훈련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

- 훈련교·강사, 강의·실습실, 훈련장비·교재 등의 변경이 해당하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훈련과정의 교·강사 변경인정의 기준**

- 다음과 같은 교·강사 변경 요건 3가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변경 인정 승인
  - (요건①) 변경 전 교·강사와 변경 예정 교·강사의 직종(NCS 소분류)이 일치할 것
  - (요건②) 변경 예정 교·강사가 NCS확인강사인 경우에는 배점기준 40점 이상일 것, 훈련기관 등록강사 및 그 외인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를 충족할 것
  - (요건③) 다른 법령 등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 드론 조종 등)에는 다른 법령 등의 기준 충족할 것
- \*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에서는 NCS확인강사만 활용하도록 하지 않음을 유의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는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내용 중 ‘**훈련가능인원**’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안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 ① 훈련기관은 운영기관에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가능인원에 대한 변경(확대, 축소)에 대하여 신청(▲변경신청 전까지의 당해 훈련과정 운영실적(이하 ‘훈련과정 운영실적’), ▲수요조사서 등 변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수요조사서 등’)를 첨부)
  - ② 운영기관 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담당 부서는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운영기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 운영실적’, ‘수요조사서 등’을 첨부)
  - ③ 고용센터는 공문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가능인원 변경

-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률이 높아 훈련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훈련 운영을 위해 인정된 훈련과정별 **훈련가능인원의 150% 내에서는 훈련가능인원의 규모 변경 없이 운영 가능**(‘22.10월~)

※ 운영기관은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상 ‘훈련실시목록 조회’, ‘훈련결과목록 조회’를 통하여 훈련과정별 훈련가능인원 초과 운영 여부 확인 가능

※ 단, 운영기관은 훈련기관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가능인원의 규모 변경”과 “훈련가능인원의 150% 이내 운영”을 무분별하게 혼용하지 않도록 훈련기관을 관리해야함

## 5. 훈련기관 지도·감독

- (원칙)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은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지도·감독 최소화(정기 감독 제외)
  - 고용센터는 민원 등이 발생(신문고, 전화제보 등)하는 경우 조속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수시·특별감독 실시\*
  - \*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항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조치
  - 단순 훈련생 불만 등의 내용은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 유도
- (유의사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감독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이 있도록 할 예정임
  - 운영기관은 공모 및 심사과정에서 우수하고 적절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훈련 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6. 훈련과정 재인정 특례

- 본 지침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훈련가능인원의 60%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훈련생 명단이 확정된 것을 의미
  - 훈련과정의 유효기간(1년) 및 훈련가능인원(기존 한도 내에서)을 재부여하는 재인정 특례 요청 가능
  - 운영기관은 재인정 특례 요건을 충족한 훈련과정이라도 특별분과위원회 의결\*등을 통해 해당 과정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 의결 내용에는 재인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포함시켜야 함

※ '24년 승인된 훈련과정을 재인정 특례를 적용하여 '25년에 공급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단가는 NCS 지원단가의 100%를 적용(다만, 재인정 특례과정이 훈련비 지원단가 우대(NCS 직종별 단가의 130%)를 유지하는 과정일 경우 NCS 지원단가의 130% 적용 가능)

※ <절차> 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이전에 운영기관에 유효기간 연장 및 훈련가능인원의 재부여에 대하여 신청 →

② 운영기관은 특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시) 특례 적용이 적절한 지를 심사한 후 적절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HRD-Net상으로 훈련과정 등록 처리 및 인정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 요청 공문 발송 →

③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기관 등에 통지

## 7. 기타 사항

- 훈련과정 승인, 카드발급, 훈련생 등록 등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름

## 6 훈련운영상황 등 사업 모니터링

- (**운영현황**)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서 인정된 훈련과정의 개설 및 운영현황(훈련과정 개설 여부, 훈련인원 규모 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서상 훈련목표인원의 수만큼 훈련과정 참여자가 실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서 인정된 훈련과정의 개설이 지연되는 등 목표 달성에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에는 ①훈련기관 대상 컨설팅, ②훈련과정의 추가 발굴·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예시) 필요 훈련과정의 발굴, 지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직업훈련 참여 희망자 파악 등

- (**훈련성과**) 운영기관은 개설 및 운영된 훈련과정별로 성과(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를 조사하여 취합·정리하여야 함

\* 훈련과정별 성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분기별 배포 예정

### ※ 훈련과정 성과지표의 개념 및 산출방식

① 모집률:  $\frac{\text{훈련참여인원수}}{\text{연간운영가능인원수}}$

② 수료율:  $\frac{\text{수료인원수}}{\text{훈련참여인원수}}$

③ 취업률:  $\frac{\text{취업인원}}{\text{훈련수료인원(실업자)}} \times 100$

\* 취업 여부의 판단, 취업률 산정방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름

④ 전직취업률:

$$\frac{\text{고용보험 상실일 이후 180일 이내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사람}}{\text{훈련수료인원(재직자) 중 훈련종료 이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유지 못한 사람}} \times 100$$

⑤ 고용유지율:  $\frac{\text{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text{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 \times 100$

\* 훈련과정 참여 시점에 실업자였던 자에 한하여 산정

⑥ 훈련생 만족도 점수: 고용24 수강평 만족도로 산정

### ※ 훈련과정 유형별 적용 성과지표 구분

-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고용유지 훈련): 모집률, 수료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전직 및 취·창업훈련):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전직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운영기관은 훈련과정의 성과가 다음 부문에서 활용될 예정임을 훈련기관에 반드시 안내하여,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훈련과정 운영을 통하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 훈련과정의 성과 활용 부문

- ① '23년 이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운영기관이 훈련과정 심사를 함에 있어 기존에 운영 이력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
- ② 훈련기관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별도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3년 이후)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관의 역량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데 활용

\* 훈련기관별 취업률, 수요자만족도 등을 산출 및 평가하여, 저평가 기관은 참여 배제

- 운영기관은 개설한 훈련과정의 성과가 차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을 심사·선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훈련·인력수요조사 및 훈련기관·과정 심사 등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료협조)** 운영기관은 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아울러, 운영기관은 사업성과평가, 제도개선연구 등을 담당할 **운영총괄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료요청 등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종합지원)**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추진 유관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규정 및 지침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7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운영기관 평가, 정산

### 1. 사업결과보고

- 운영기관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을 운영한 후, 그 추진사항 및 성과 등을 정리하여 **운영총괄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시기 및 제출 양식 등은 별도 공지
  - 이 경우, **운영비(예산) 사용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영총괄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운영기관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내용 및 훈련과정의 성과 등을 분석하여 평가 등 수행
  - \* 지원대상산업·직종 및 육성산업·직종의 선정, 훈련기관 발굴, 훈련과정 개발 및 성과목표·관리 등 적정 여부, 이·전직, 고용유지 등에 따른 훈련과정 성과 등
  - **운영총괄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각 운영기관별로 평가한 결과는 사업개선방안 도출 및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 예정

## 2. 운영기관 평가

- 운영총괄기관은 운영기관이 제출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평가지표는 정량지표(예시: 개설율, 목표달성도), 정성지표(예시: 우수 훈련과정 개설 여부 및 노력,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노력)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평가지표별 정의(예시)

정량	개설율	'개설된 훈련과정의 수' / '각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훈련과정의 수'
	목표달성도	'훈련참여인원 수' / '각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상 훈련목표인원의 수'
정성	우수 훈련과정 개설노력 및 결과	기존에 공급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훈련과정을 개설하려는 노력 및 그 결과 등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노력	지역별·산업별 고용상황,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노력 등

## 3. 정산

### < 1. 운영기관의 운영비 >

- 운영기관은 운영비 정산업무를 위탁할 회계법인을 개별 선정
  - 회계법인은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운영비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산을 실시(위탁계약 종료 이전 1개월 이내)
  - 정산 결과, 부적정 사용금액\* 및 잔여 금액은 환수 조치
- \* ① 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대금을 사용한 경우  
 ② 지출항목을 위반한 경우,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출한 경우
- 각 운영기관은 회계정산 실시 후 정산보고서를 위탁계약 종료 이전 까지 운영총괄기관에 제출(제출 기한 별도 안내 예정)

## < 2. 훈련기관의 훈련비(NCS 훈련비 지원단가 130% 초과 지원 시) >

- 고용센터는 NCS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훈련기관에 훈련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훈련실시인원(중도탈락자 포함) 수' 기준으로 지급된 훈련비는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비목별 별도 정산 후 필요시 환수됨을 안내

### < (정산시) 고정비 및 변동비 비목 구분 >

고정비	훈련 실시인원(중도탈락자 포함) 기준으로 인정되는 훈련비 비목	강사료, 시설비(임차비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홍보비
변동비	훈련생 출석률 기준으로 인정되는 훈련비 비목	교재비, 실습비, 장비비, 기타훈련비용, 운영지원비

- \* 훈련비 심사를 받은 훈련과정의 정산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정산계획 별도 시달 예정
- \*\* 기타간접비용은 10% 초과 사용(최대 15%)시 전체 사용금액을 증빙하여야 하며 훈련관련성 및 적정성 확인 예정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훈련 기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NCS세분류)				
훈련내용 (교재 포함)	훈련 시설·장비	훈련시간 (훈련일수)	훈련방법	훈련가능인원	정원	훈련비	훈련 장소	교·강사
		시간 (일)	집체훈련		명	원		

‘23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른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 ]인정·[ ]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직업능력개발정보망<RD-Net>에 입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 람	과장	팀장	담당
	. . .						
※ 처 리	①인 정 여 부			[ ] 인 정		[ ] 불인정	
	②불 인 정 사 유						
※ 결 재	담 당	팀 장	과 장	소 장	청(지청) 장	결 재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실시계획서

(제1쪽)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①명 칭		②훈련기관 관리번호		③대 표 자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 훈련시간표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제출

가. 훈련개요

⑥훈련과정명		⑦훈련직종 코 드 (NCS세분류)		⑧훈련 가능인원	
⑨훈련유형 및 방법	[ ]집체훈련과정	⑩관리자		⑪전 화	
⑫훈련기간	⑬훈련시간	⑭학급정원 (학급수)	⑮훈 련 일 수 (시간/주·야간)	⑯1인당수강료	⑰교재비 등
					[ ]수강료 포함 [ ]수강료 미포함 ( 원)

나. 훈련내용 (※원격훈련과정은 훈련과정 개요서도 제출할 것)

⑱훈 련 목 적	⑲주요 훈련내용	⑳관련 자격증	㉑훈련생 출결관리방법	㉒수료기준

다. 훈련교재

㉓교 과 목	㉔교재명	㉕자체 또는 구 입 여 부	㉖교재 가격

3. 훈련과정의 필요성(요약) ※ 필요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

훈련 기관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불인정사유	
-------	--

인정 훈련과정 내역								
훈련과정명 (과정ID)				훈련직종 (NCS세분류)				
훈련내용 (교재 포함)	훈련 시설·장비	훈련시간 (훈련일수)	훈련방법	훈련가능인원	정원	훈련비	훈련 장소	교·강사
		시간 ( 일)	집체 훈련		명	원		

‘23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지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 ]인정·[ ]불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명서

소명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명대상	(예시) 귀 기관이 심사를 신청한 훈련과정 A는 ‘22년 통합심사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훈련과정 B와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등을 고려할 때 중복(유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양 과정이 중복되지 않음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내용	(훈련기관 작성)
증빙자료	(훈련기관 작성)

본 소명기관은 소명내용과 증빙자료가 진실되며,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배제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소명기관(대표) (서명)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 교·강사 변경 신고서

□ 신고기관

훈 련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훈 련 과 정 명		훈 련 과 정 ID	

□ 훈련교·강사 변경 신고 사항

교과목		변경전 교강사					변경후 교강사					
교과목명	NCS 직종	교강사명	주민등 록번호	NCS 직종	변경 회차	평가 점수	교강사명	주민등 록번호	NCS 직종	변경 회차	평가 점수	임시 기간
※ 변 경 사 유		결혼, 예비군/민방위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 교·강사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고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 교·강사 변경인정 신청서

□ 신청기관

훈 련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훈 련 과 정 명		훈 련 과 정 ID	

□ 훈련교·강사 변경인정 신청 사항

교과목		변경전 교강사					변경후 교강사				
교과목명	NCS 직종	교강사명	주민등 록번호	NCS 직종	변경 회차	평가 점수	교강사명	주민등 록번호	NCS 직종	변경 회차	평가 점수
※ 변 경 사 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 교·강사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 변경 인정 통지서

### □ 신청기관

훈련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훈련과정명		훈련과정 ID	

### □ (불)인정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인정여부
① 훈련기간	~	~	
② 훈련장소			
③ 강의실	(면적:    m²)	(면적:    m²)	
④ 실습실	(면적:    m²)	(면적:    m²)	
⑤ 훈련교사(강사)			
⑥ 훈련장비 (소프트웨어)			
⑦ 훈련교재			
⑧ 기타			
※ 불인정사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정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 훈련가능인원 변경 신청서

□ 신고기관

훈 련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훈 련 과 정 명		훈 련 과 정 I D	

□ 훈련가능인원 변경 신청 사항

변경 전 훈련가능인원		변경 후 훈련가능인원	
※변 경 신 청 사 유	기존에 파악한 훈련수요와 실제 훈련수요와의 차이, 훈련운영상황의 변화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가능인원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